

1.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 교원에게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내국인 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보험료 체납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한 것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불합리하고,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조항은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소관 부처의 장이 이를 대표한다.
- ③ 변호사로서의 경력이 15년 이상이더라도 40세 미만인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 ④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은 의장으로 회의의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 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 ②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14일로 정한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③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④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다.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당을 제외한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규제의 위헌여부는 비례성원칙이 아닌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 ③ 여론조사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나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의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에서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5. 재판청구권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ㄱ.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 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ㄷ.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것은 보상제도의 성격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ㄹ. 소취하 간주의 경우에도 소송이 재판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한 규정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재산적 부담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6.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하며,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의 성격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다.
- 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헌법 제23조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 토지의 가격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하도록 한 것은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조합원 개인에게 보장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여 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장 등에게 보내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③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은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④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재식별금지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⑤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8.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하였다.
-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초대 대통령에 대한 3선 제한을 철폐하였다.
- ③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며,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였으며,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였다.
- 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하였으며,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였다.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아닌 특정한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같은 심급뿐만 아니라 상소심의 소송절차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며, 결정의 선고와 달리 서면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0.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③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헌법적 지침을 제시하며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④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1.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②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법관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 형벌의 개별화원칙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③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형의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도 있다.
- ④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형법」 제129조제1항의 수뢰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2. 계약의 자유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ㄱ.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하면서, 그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 ㄴ. 계약자유 원칙 내지 경제상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약자 보호·독점방지·실질적 평등·경제 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국가의 과세작용과 관련 하여서도 적지 않은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 ㄷ.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하나이다.
 - ㄹ. 계약의 자유는 헌법 제119조제1항의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의 일종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포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권이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13.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조세의 효율성과 타당한 사용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 주요 책무이자 권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이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국민에게 납세자로서의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고 세부담이 증가한다면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 ②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적용은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과세요건이 법률로 규정되어야 함은 물론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 ③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개발부담금은 비록 그 명칭이 ‘부담금’이고 국세나 지방세의 목록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조세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세로 보아야 한다.
- ⑤ 요트장, 스키장 등의 경우와 달리 골프장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출액, 이용료, 이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14.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②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既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④ 국가원로자문회의는 헌법상 임의기관이며, 직전 대통령이 그 의장이 된다.
- ⑤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15.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금혼조항) 및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무효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 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재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16. 환경권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ㄴ. 환경영향평가지역 안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은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 보아야 한다.

ㄷ. 어떠한 경우에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미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국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미래 예측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7.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②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는 한편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항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 표현행위라고 볼 수 있어,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18. 국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기결정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위원회는 예산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위원회가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그 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19.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안전조정위원회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구성되며, 조정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②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회기’는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③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 회의장 안에서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 ④ 국회의원은 국회의 의결로 사직할 수 있으므로 폐회 중에는 사직할 수 없다.
- 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0.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의 보장을 그 보호영역으로 한다.
- ③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침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 ④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법관이 되려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⑤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1.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할 수 있으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
- ②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도 감찰할 수 있다.
- ④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까지 한다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2.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모두 토요일에 실시하도록 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개 종교의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종교적 행위의 외적 강제에 해당하고,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 ③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상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납골시설의 설치·운영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제가 발생한다.
- ⑤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3요소를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된다.

23. 다음 <보기>의 ㉠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 < 보 기 > —
- (㉠)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 (㉢)세 미만의 국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세 이상의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 ① 68
- ② 70
- ③ 73
- ④ 77
- ⑤ 79

24.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 등을 파견한 국가는 판결의 집행으로부터의 면제의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인 바, 동 협약에 가입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다.
- ③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조약으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고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존재한다거나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구 농림수산물식품부 고시)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2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 할인의 범위를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 전후’ 또는 ‘숙취 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된다.
- ④ 공무담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
- ⑤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수입·판매하려는 자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요구하는 「화장품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